

# ‘마약 롤스로이스男’...코인사기도 연루

### 신모씨 등 4명, 코인 사기 피소...경찰 수사 중 병원 10여곳 압수수색...마약 상습투약 수사 “조총련 추모식 참석 추가 확인 땀 의욕 김도”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씨가 코인 사기에도 연루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신씨를) 포함해 4명이 코인 관련 사기로 고소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출국 금지 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받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다졸람(마취제의 일종)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로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의 상습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 지난 주까지 병원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선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가 다수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경찰에 접수된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

행하고 있는 검찰과 현재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화천대우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이 같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경찰도 사건을 넘길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재일본조선인총연맹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고발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당시 추모식에 다른 한국 국적자가 있다면 반국가단체 접촉 행위도 범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필요할 경우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도 경찰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학부모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와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 여수해경, 대학생 잠수 교육을 위한 재능 기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경찰구조대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학생들에게 잠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완도소방-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업무협약(MOU) 체결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9일 완도소방서에서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회장 차욱)와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문화·사회체험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담양소방, 소방드론 ‘눈부신 활약상’ 기대대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7일 소방서 청사 일원에서 지휘관 등 현장대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드론 운용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양소방, ‘안전한 추석’ 위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8일 오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주거용 컨테이너 하우스에 방문해 화재안전 행경지도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 무안경찰, 산책로 및 근린공원등 범죄예방 방법 진단 전개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원)는 이상 동기 범죄예방 특별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무안군 관내 주요 산책로와 근린공원 내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보성경찰, 생활안전협의회 간담회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지난 11일 각 파출소별 생활안전협의회장·총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성=김철순기자

## “좌·우회전 분리 안돼...역주행도” 광주 남구 A학교 등곳길 혼잡

### 8월 중순부터 한달간 역주행 민원 20여건



11일 오전 광주 남구 송하동 한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가 우회전 차로가 막혀있자, 입구로 역주행해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도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광주 한 학교에서 대로로 향하는 차선이 분리되지 않아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오전 광주 남구 송하동 A 학교 초·중·고교가 모여있는 이 학교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전후로 통학 차량과 자녀를 바래다주는 학부모 차량들로 혼잡했다.

특히 학교에서 대로로 나가는 차로는 신호대기 차량으로 10여m 긴 줄이 늘어섰다.

차량 통행량은 많은 반면 큰 도로로 나가는 좌·우회전 차로는 좁고 구간이 짧았다. 또 교통섬을

따라 우회전을 유도하는 차로인 좌회전 차선도 함께 있어 차량 운행 흐름도 원활치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역주행해 빠져나가는 차량들도 보였다.

우회전 진입로에 통학 차량 2대가 하차할 위해 정차해있자, 또다른 통학버스는 비상감박이를 켜고 진입로로 역주행해 길목을 빠져나갔다. 한 승용차는 학교에서 차량 대기 신호가 바뀌자 진입로로 역주행해 좌회전했다.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은 역주행해 나가는 차량, 학교로 들어오는 차량 사이를 지나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넜다.

좌회전 차량 신호도 4초 가량으로 짧아 2~3대

만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49)씨는 “등곳길이면 도로 일대가 많은 차량으로 복잡하다”며 “일부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겨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만큼 만일에 대비해 대책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등교가 시작된 지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역주행 등 혼잡·법규 위반 등 관련 민원만 20여건 접수됐다.

학교측도 민원이 제기되자, 진출입로를 나누는 구분선을 바꾸고 진입 금지 안내판도 세울 계획이지만 도로의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있다.

A중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이전할 때부터 도로 계획 설계에 따라 좌·우회전 차선이 함께 있었다”며 “학부모들께 교내 차량 출입 제한을 안내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제한 자체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러 기관이 모여 차량 통행량과 도로 구조 등을 살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을 유도하는 차로에 좌·우회전 차선이 함께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교통섬의 선형을 바꿔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삼각 교통섬을 선형으로 바꾸는 방법과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해 우회전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도로를 바꾸는 것은 관리 주체가 예산 문제가 연관돼 있는 만큼 여러 기관이 모여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광주·전남 조합장선거사범 301명 입건·154명 기소

### 당선자 17명도 재판 넘겨져...금품선거 사범 212명 최다

광주·전남에서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301명 중 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광주·전남 3회 조합장 선거사범 입건자(301명)는

2회 조합장 선거(238명)와 비교하면 26.5% 늘었다.

이번 3회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 31명(10.3%), 기타 58명(19.3%) 순이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8.5%, 흑색선전 사범은 16.8%였다.

이번 3회 조합장 선거에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실제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는 측근과 함께 조합원 20명과 마을 이장에게 17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선자 B씨는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경쟁 후보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우편 발송한 조합원과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낙선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 추석 연휴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 적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함동 접점에서 서홍동 소재 A선과장에서 사전 출하신고되지 않은 채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인 착색 미달 비상품 감귤 6.6t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감귤유통

조례)에 따르면 풋감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 시에도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6.6t은 이 같은 사전 신고가 안 된 것이다. A선과장은 과거에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적발된 불량 전량을 폐기 조치했

고, 서귀포시는 A선과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귤유통조례상 ▲감귤 후숙 및 강제착색 ▲품질 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전체적으로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뉴스